

참고 2.

향후 자영업자 재무건전성 전망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대면 거래를 통해 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¹⁾를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단계 조정으로 경제주체의 소비활동이 크게 위축된 데다 국경 봉쇄(lockdown)에 따른 해외 관광객의 수요도 급감하면서 업황 부진이 심화되었다.

이하에서는 가계부채DB, 가계금융·복지조사(19년) 등의 미시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가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에 미친 영향과 함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²⁾의 효과를 추산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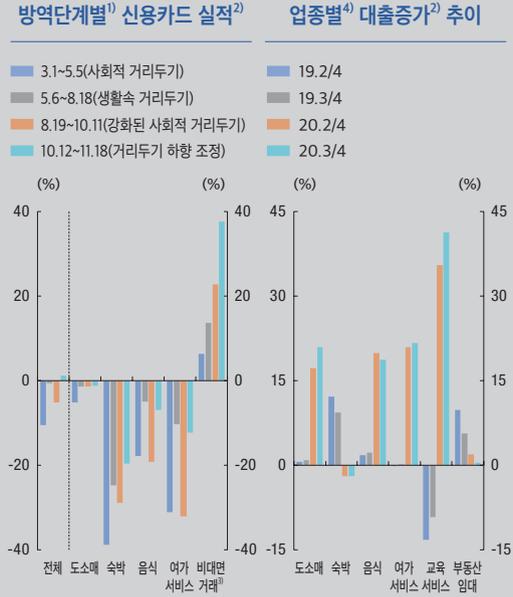
최근 자영업자 동향

자영업자 매출은 코로나19 확산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³⁾ 지급 등의 요인에 따라 감소폭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는 비대면 거래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숙박, 여가 서비스, 음식이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기록하였다.

2020년 9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777.4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9%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는 도소매, 음식, 여가서비스 등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여 매출 감소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분을 대출을 통해 일부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매출 및 대출 동향



주: 1) 사회적 거리두기(3월 22일~5월 5일),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5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8월 19일), 2.5단계(8월 30일) 격상(수도권) 등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인터넷상거래 및 통신·우편판매 기준
 4) 중소기업 식별이 가능한 자영업자 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여신금융협회

1)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종사자, 기타 종사자(학습지 교사 등)인 가구를 포괄한다.
 2)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를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조치는 2021년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금융위 보도자료, 20년 3월 31일 등).
 3) 정부는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국 2,216만 가구에 총 14조 2,357억원을 지급하였다. 지원금은 마트·식품(2.5조원, 전체 사용액 대비 26.3%), 대중음식점(2.3조원, 24.3%), 병원·약국(1.2조원, 10.6%), 주유소(0.6조원, 6.1%) 등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재무건전성 전망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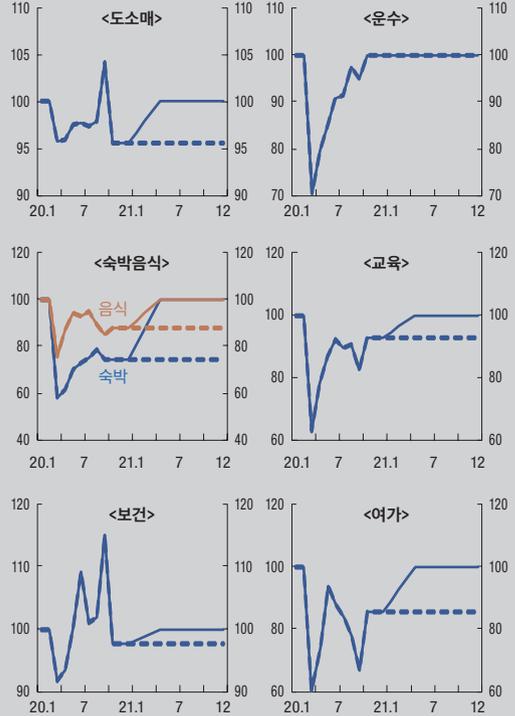
전체 자영업자 가구 중 매출충격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가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⁴⁾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총소득이 필수지출⁵⁾을 하회하는 가구를 '적자가구'로 식별하였다. 적자가구 중에서도 금융자산⁶⁾을 활용하여 적자에 대응할 수 없는 가구를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가구'로, 자산이 부채를 하회하여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에 처하게 되는 가구를 '상환불능(insolvency risk)가구'로 구분하였다.

향후 자영업 업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으로 내년 2/4분기 이후 매출액이 충격 전 수준에 도달하는 상황(기본 시나리오)과 금년 10월 매출현황이 2021년말까지 지속되는 상황(비관적 시나리오)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한편 각 시나리오에 대해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20년 4월 1일~21년 3월 31일 시행)의 효과도 분석⁷⁾해 보았다. 아울러 내년 3월 후에도 동 유예 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의 효과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액 변화¹⁾

--- 매출충격 지속(비관적 시나리오)²⁾ — 매출 회복(기본 시나리오)³⁾



주: 1) 충격 전(20년 1~2월)의 매출액을 100으로 지수화
 2) 2020년 10월의 매출액이 이후에도 지속
 3) 2020년 10월의 매출액이 연말까지 지속되다가 2021년 1/4분기중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2/4분기부터 충격 이전 수준을 회복
 자료: 여신금융협회, 한국은행 산

테스트 결과

2020년 2월 대비 2021년 12월 수치 변화를 살펴 보면 전체 주요 업종의 자영업자 가구 중에서 흑자 상태를 지속하는 가구 비중이 79.2%에 달한다. 반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가구는 1.5%, 적자 상

4)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이는 주요 업종(도소매, 운수창고, 숙박음식, 부동산, 교육, 보건, 여가, 기타 개인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동 주요 업종은 244만 가구로 전체 자영업자 가구(453만)의 53.8%를 차지한다.
 5) 총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수지출에는 생계유지 등을 위한 최소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 통신, 식비 등 불가피한 소비지출, 세금 등의 비소비지출, 원리금상환액 등을 포함하였다.
 6) 금융자산에는 저축, 펀드, 보험, 주식 등을 포함하였으며, 보험은 70% 해지환급률을 적용하였다.
 7) 원리금 상환유예 신청요건(지원 대상, 적용대상 대출 등), 금융기관의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전체 자영업자 중 원리금 상환유예를 적용받는 가구는 약 50%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태를 지속하는 가구는 18.8%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로 오히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0.5%)되었다.

코로나19 충격 전후¹⁾ 자영업 가구의 수지 변화²⁾

(만가구, %)

	가구 수	비중
전체 가구	243.7	(100.0)
흑자가구	194.2	(79.7)
흑자 → 흑자	193.1	(79.2)
적자 → 흑자	1.2	(0.5)
적자가구	49.5	(20.3)
흑자 → 적자	3.7	(1.5)
적자 → 적자	45.7	(18.8)

주: 1)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2020년 2월, 2021년 12월의 수지상황을 비교

2) 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기준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적자가구)

자영업자의 적자가구 증감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구 비중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나타나기 직전인 2020년 2월 19.2%(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대비, 이하 동일)에서 충격 직후 3월 21.8%로 상승하였다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에 힘입어 내년 3월에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18.8%,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19.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이후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유예되었던 원리금의 분할상환 부담이 추가되면서 적자가구 비중이 내년 12월에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20.3%,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2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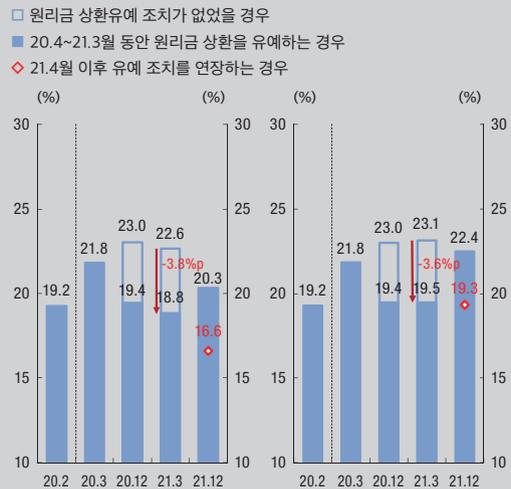
시나리오 하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충격이 크게 나타난 금년 3월 수준(21.8%)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년 4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효과를 살펴보면, 내년 3월까지 적자가구 비중을 3.6~3.8%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의 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내년 12월에 기본 및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적자가구 비중이 16.6%, 19.3%의 낮은 수준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수지 적자가구¹⁾의 비중²⁾ 변화

매출 회복 시

매출충격 지속 시



주: 1) 2020년 1월부터 해당 시점까지의 누적 가계수지 기준

2) 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대비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유동성 위험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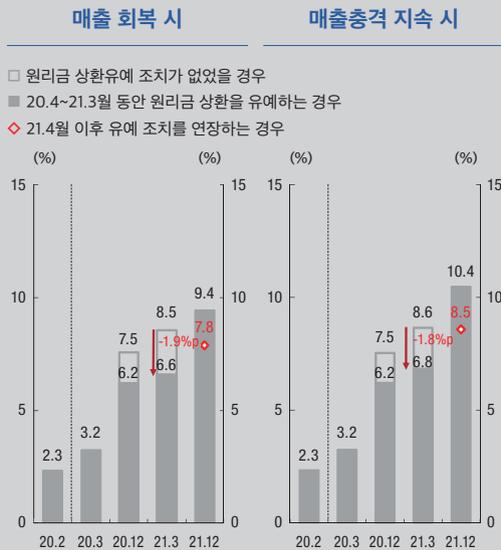
자영업자 적자가구 중에서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하는 유동성 위험가구는 정부의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충격 이전부터 적자 상태였던 가구의

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보유 금융자산을 소진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데 주로 기인한다.

유동성 위험가구 비중은 2020년 2월 2.3%에서 2020년 3월 3.2%로 상승하고 내년 3월에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6.6%,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6.8%로 큰 폭 상승하여 금년 3월의 약 2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1년 12월에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9.4%,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10%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3월까지 유동성 위험가구 비중을 1.8~1.9%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내년 12월 7.8%, 8.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유동성 위험가구¹⁾의 비중²⁾ 변화



주: 1) 2020년 1월부터 해당 시점까지의 누적 가계수지 적자가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가구

2) 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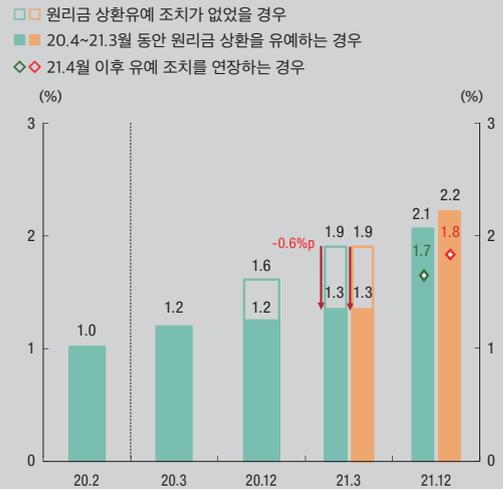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상환불능가구)

자영업자 적자가구 중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상환불능가구를 살펴보면, 상환불능가구 비중은 2020년 2월 1.0%에서 2020년 3월 1.2%로 상승하고, 내년 3월에는 두 시나리오 하에서 모두 1.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2월에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2.1%,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3월에는 상환불능가구 비중을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내년 12월에 기본 및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1.7%, 1.8%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자영업자 상환불능가구¹⁾의 비중²⁾ 변화³⁾



주: 1) 2020년 1월부터 해당 시점까지의 누적 가계수지 적자가 순자산을 초과하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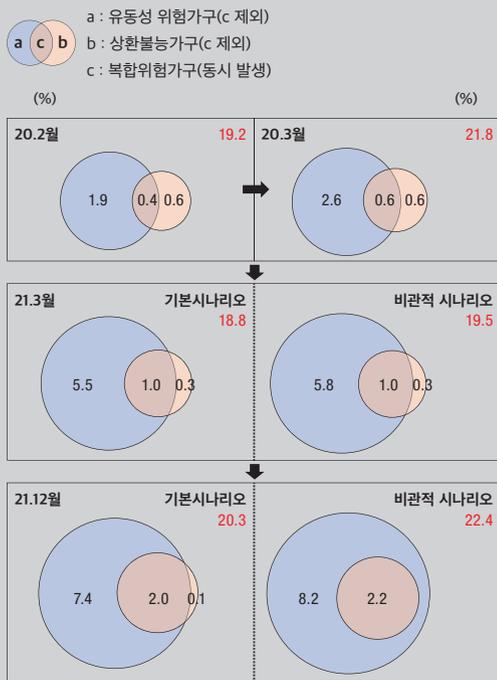
2) 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대비

3) 초록색, 주황색은 각각 매출이 회복되는 경우, 매출충격이 지속되는 경우를 나타냄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자영업자 가구의 리스크 변화를 살펴보면 적자가가구 비중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반면, 유동성 위험가구와 상환불능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동성 위험과 상환불능에 동시에 처하는 가구(복합위험가구) 비중이 2020년 2월 0.4%에서 2021년 12월 2.0~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복합위험가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이 해소된 이후에도 재무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⁸⁾

자영업자 유동성 위험가구와 상환불능가구의 변화¹⁾²⁾



주: 1) 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대비 비중
 2) 붉은색 글씨는 적자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적자가구, 유동성 위험 및 상환불능 가구 증가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대응조치로 인해 상당 부분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 4월 이후 지원조치가 종료되면서 적자가구 비중이 다시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시적인 금융지원 조치로는 자영업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유동성 위험가구 및 상환불능가구의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시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적자 상태에 있던 가구의 경우에는 매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충격 지속으로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경우 자영업자의 재무상황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인지, 상환불능 상태인지를 구별⁹⁾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¹⁰⁾

아울러 자영업자의 매출충격이 대면거래 업종에 집중된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소비행태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본고의 분석에서는 복합위험가구의 경우 매출 회복 시에도 단일위험(유동성 위험 또는 상환불능)이나 단일위험 이전 상태로 전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면 특정 업종(부동산 매매·임대, 사행성 등 관련 업종)이나 연체 중인 업체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리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0) 자영업자에 대한 폐업정보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법인가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로 살펴보면, 유동성 부족기업(유동비율 100% 미만)의 1년 이내 폐업률은 자본잠식(순자산<0)에 처하지 않은 경우 0.8%에 그치지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8.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동성 부족 및 자본잠식이 동시에 발생한 차주의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한국은행 시산, 20년 11월).